

시론



박노식 시인·시엔영 원장

졸곧 시만 쓰던 사람이 잡문 형식의 글을 청탁받게 되면 몹시 곤혹스러워진다. 기존에 자유롭게 드나들던 시적 영역이 일단 놀라서 멈칫거리고 어서서 몸은 긴장 상태로 굳어지고 만다.

더구나 마감 일자를 의식하는 일만큼 괴로운 것도 없다. 특히 시의성과 관련된 글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고 요즘처럼 긴박한 상황 속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시적 일상이 깨지기 일쑤다.

시적 일상을 회복하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 뇌리에 박힌 바글바글한 잡념들을 떨쳐내는 일도 쉽지 않고 억지로 끄집어낼 수도 없다. 그저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인데, 이럴 때는 시(詩)에게 미안한 생각마저 들 때가 있다.

지난 주말에는 오토이 광주시 동구에서 주최한 무등산 인문축제 ‘꽃 핀 쪽으로 뽀짝, 희망으로 뽀짝’ 행사에 참가해 광주 시민들이 누리는 감성의 인문축제를 지켜봤다.

대부분 가족과 연인, 그리고 청년과 어린

아이들이 각 부스별로 기획된 행사장에서 체험하며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일상의 평화로움과 즐거움이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대선이 코앞인지라 어른들은 기대와 우려의 얼굴이 얼핏 보이고, 결국 희망의 빛을 찾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기라도 한 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자리를 뜨는 것이다. 이처럼 아름다운 평화와 신명이 곧 찾아오기를 우리는 기대할 뿐이다.

인도는 영국 식민통치에서 1947년 독립 이후 현재 14억여 명의 인구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당선돼 2024년 3연임에 성공하면서 독립 후 신분제인 ‘카스트 인구 조사’를 결정하기로 했다. 독립 후 80여 년 만에 공식적으로 첫 계급별 인구 구성을 파악하는 시도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는 인도 정부가 사회 전체의 가치와 이익을 중시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인도 정부는 특히 이번 조사에 대해 ‘사회 복지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사회 취약 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면 카스트 정보를 재확인하고 또 그 정보의 실태를 반영한 정밀한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라는 취지다. 즉 이번 조치가 경제, 사회적으로 소외된 모든 계층에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한다.

모디 총리가 집권한 지난 10년간 인도의 국내총생산(GDP)은 두 배 이상 성장했다. 더

구나 세계 경제 10위에서 5위로 급상승했다. IMF가 발표한 세계전망보고서는 인도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 4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고, 2028년에는 3위인 독일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모디 총리는 미국, 러시아가 벌인 것 없이 ‘실리 외교’를 추구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모디 총리의 강점이면서 추진력이다.

모디 총리가 이처럼 경제 성장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그의 성장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가난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봤고 그 속에서 어린 시절 내내 가난에 찌들어 살았다”고 했다. 또 그는 9살 때부터 친구들과 함께 음식 노점을 했으며, 15살이 되던 해에는 식료품 상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기차역 노점에서 밀크티를 팔며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브라만(성직자), 크샤트리아(귀족), 바이샤(상인), 수드라(노동자) 4계급인데, 이 중에 그는 최하층인 수드라 출신이다. 그 아래 불가촉천민 계층은 아예 공식 분류조차 되지 않는다.

모디는 “나의 힘은 내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14억 명의 인도 국민에 있다”고 말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다. 모디 총리를 보면서 소년공 출신이었던 한 후보가 오버랩된다.

기고



이성일 (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 광주·전남지부장

정치란 무엇인가. 선거철이 되면 뉴스에 등장하는 구호와 말잔치, 혹은 싸우기 바쁜 국회 모습이 먼저 떠오를 수 있다. 그러나 정치는 단지 표를 얻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존’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고민이자,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다.

정치의 첫 번째 덕목은 방향성이다. 프랑스 대혁명이 구시대적 전체 체제를 걷어내고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이정표를 세웠듯, 정치는 사회가 어디로 향할지를 결정짓는 나침반이어야 한다. 국민의 삶을 향한 올바른 방향 없이, 정치는 그저 표류하게 된다.

두 번째는 진심이다. 국민 앞에 서는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면,

정치는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방법을 찾는 일이다

그 정치엔 혼도 감동도 없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는 27년의 옥고 끝에 중오가 아닌 화합을 택했다. 그것은 단순한 전략이 아닌, 오랜 고뇌 속에서 비롯된 진심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셋째, 정치에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자신의 주장만 내세운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는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현실 속에서 조율과 타협은 필수다. 독일의 통일도 마찬가지로 긴 시간의 협상과 인내, 서로를 향한 존중이 만들어낸 통합의 결과였다.

넷째, 정치를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제도화가 필요하다. 미국 헌법 제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제도 정치의 출발점이었다. 일시적 감정이나 흐름만으로는 사회를 이끌 수 없다. 제도 없는 정치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국민 참여다. 1987년 한국의 6월 항쟁은 시민의 절박한 열망이 직접 정치의 판을 바꾼 상징적인 사건이다. 결국 정치는 국민이 주인이 되고, 직접 움직일 때 비로소 변화가 가능해진다. 시민의 목소리는 정치의

뿌리이자 원천이다.

여섯째, 권력에는 책임과 견제가 필연적으로 따라야 한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권력은 감시와 책임 없이는 오만해지기 쉽고, 민주주의는 그러한 균형 위에서만 지켜질 수 있다.

일곱째, 정치는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어야 한다. 오늘날 보고 움직이는 정치는 내일을 망치고, 다음 세대에 짐을 떠넘길 뿐이다. 유럽연합의 탄생은 과거의 전쟁을 반성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평화와 통합을 선택한 결단이었다. 이는 정치가 어떤 시간의 감각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정치는 누가 이기느냐, 누가 더 센 말을 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다. 정치는 국민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사회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집단적 노력이다. 지금 이 시기야말로, 우리 모두가 정치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고 물어야 할 때다. 정치인들은 다시 자신에게 질문해야 한다.

“나는 지금,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직장 내 괴롭힘

내 괴롭힘 금지 관련법을 마련했다. 2021년에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에게 객관적인 조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로기준법을 보완했다.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의 상담사례집에 따르면 장애인근로자의 노동 분야 상담 중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 비율은 2021년 51%, 2022년 54%에서 2023년 48%로 소폭 감소했다가 2024년 다시 5%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상 큰 변동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다수의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현재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장애인근로자 특히 자신의 권리를 적확하게 주장하고 방어할 힘이 미약한 발달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 의사소통에 애로를 겪는 청각장애인, 전문적인 소통의 통로가 미흡한 정신장애인 등은 관리자의 부당한 간섭이나 과도한 관리, 신체적 강압과 정신적 학대를 견뎌내기가 더욱 어려

울 수 있다.

광주장애인근로자 지원센터는 괴롭힘의 문제가 사법적 시스템으로 처리되기 전 컨설팅 성격의 집단상담을 통해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려 노력하고 발생 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다각적인 중재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생활 유지와 사업주에게 도움을 주고자 운영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된 경우 사업주는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피해자의 의사를 반하지 않는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피해자를 보호하고(피해자 요청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가해자를 지체없이 징계해야 하며(조치 전 피해자의 의견 청취)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학교폭력이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 특히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여러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려는 기업의 문화 정착과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説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대한민국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선거운동 종료까지 지지층 결집을 극대화하고 중도층을 향해 구애하며 특표전에 사활을 걸었다. 이재명 후보는 정권 심판론으로 선명성을 부각하면서 통합과 회복 성장을 강조하는 전략을 이어갔다.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와 가족의 사법 리스크를 파고드는 동시에 반(反) 이재명과 경제 살리기를 내세워 막판 뒤집기를 시도했다.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다. 높은 사전투표율은 국가 정상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권 3곳 모두 50%대를 돌파하며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은 정권 교체의 열망이 투영된 결과란 분석이 나온다. 물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수의 텃밭 대구가 최저치를 찍는 등 영남권은 전국 평균 34.7%를 넘어서지 못했다.

본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최종 투표율이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맞붙었던 1997년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80%를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된 19대 대선에서는 77.2%를 기록

했다. 이번 선거는 계엄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비롯됐다. 정권 심판에 표심이 기울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내심 낙관하면서도 자만을 경계하는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리한 구도지만 지지를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다며 판세를 분석하고 있다.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속절없이 민생 경제가 무너지고 있으며, 관세 전쟁의 거센 파고에 휘말려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역시 난마처럼 얽혀 있다. 국론 통합도 시급한 지상과제다. 국정 of 근본적 전환을 위한 중대 변곡점으로 삼아야 한다. 주권자의 힘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개표 관리까지 차질 없이 준비를 마쳤다. 사전투표 관리 상의 일부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치해야 한다.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면서 일체의 방해 행위에는 엄중 대처해야 한다.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나라와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거다. 투표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자 의무다. 공정과 정의, 원칙을 바로세우는 역사적 선택의 날이 밝았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준비되고 유능한 리더를 뽑아야 한다. 빠짐없이 참정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대한민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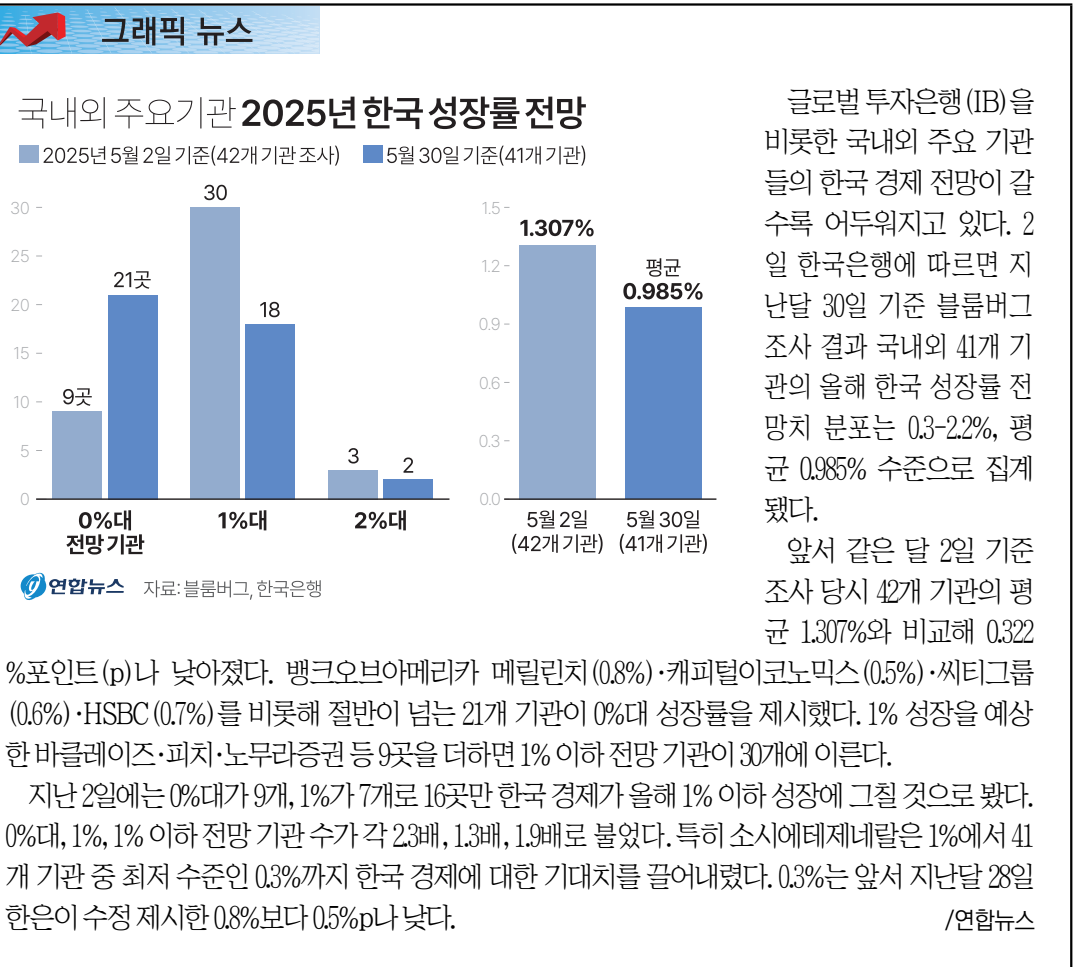
금호타이어 위기대응 광주시 TF 제대로 역할해야

광주시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에 따른 위기대응 민·관합동특별팀(TF)을 구성했다. TF는 복구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용 및 경제 생태계 전반에 미칠 파장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꾸려졌다. 광산구도 범대책기구 운영에 나섰다. 앞서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일부 시민사회 단체도 공동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서둘러야 하겠다.

광주 대표 사업장이다.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는 만만찮은 과제를 안고 있다. 본격 가동에 들어간 민·관합동TF를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노동자 고용 보장, 생태환경 점검, 주민 피해 보상·지원, 새로운 공장 건설 등을 망라해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특히 1만1천430명이 1만7천966건의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다. 광산구가 운영을 종료했지만 금호타이어 측이 계속 접수하는 만큼 규모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광주연구원은 생산 중단에 따른 매출 감소 규모는 연간 3천375억8천500만원으로 추정했다. 또 근로자 2천530명의 총급여액이 625억9천800만원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지역 내 생산 감소 4천500억원, 취업자 감소 유발 2천218명의 피해를 추산했다. 소비 감소액도 427억2천300만원에 이르는 등 막대한 손실을 예상했다. 연구원은 지역화폐 발행, 생생상품 소비 촉진 등 실질소득 보전과 소비 진작으로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여기에 기존 공장 재설치의 매몰 비용을 고려하면 합계 빚그린산단 이전, 신규공장 설립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호타이어 화재로 위기가 커지고 있다. 생활환경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복합적이고 광범위하다. 강기정 시장은 고용 보장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은 새 공장을 짓는 일이라며 적극 협력·지원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뒤늦게라도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역할을 해내야 한다. TF의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정치부 650-2030

경제부 650-2050

사회부 650-2040

문체부 650-2065

지역특집부 650-2060

사신부 650-2080

논설실 650-2006

T V 본부 650-2009

서울지사(02) 786-9488

광고문의 650-2099

마케팅본부 650-2070

경영지원부 650-2011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20

FAX 650-2016

광고국 650-2017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지침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